

풀뿌리 아카데미 특강 박지원 의원 인터뷰 ▶3

광주 '숨바꼭질 공포' 경찰 수사 나서 ▶6

갤러리 변신한 광주 대의동 고시학원 ▶1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http://kwangju.co.kr)

제19692호 1판 2014년 3월 7일 금요일 (음력 2월 7일)



미래의 유권자도 “투표 참여 하세요”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서 ‘미래 유권자’인 어린이가 선거일과 요령 등이 적힌 전동 자동차를 타며 활짝 웃고 있다. ‘1390’은 선거법과 투표요령 등이 안내되는 선거 풀센터 전화번호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 선거 코앞… 지자체 수상한 공사 발주

무안·영광·장흥군 등 수십억대 사업 잇단 입찰 ‘눈총’

6·4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전남지역 일선 군들이 대규모 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현직 단체장이 수십억원의 규모를 이들 공사에 투입하면서 선거 이후에는 쓸 예산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공사 입찰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7일 장흥군 고급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10일 영광군 백수읍 대신항 개발 사업, 13일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파도풀 설치사업 등을 계약한다. 또 곡성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심청 효문화 체험 및 경관조성사업’의 입찰공고를 냈다.

이들 사업들은 2~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방선거와는 관계없이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해당 지자체들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의 사정에서 보면 그 규모가 큰데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논란도 일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억2000만원을 들여 회산백련지에 2000㎡ 규모의 물놀이장을 설치한 후 곧바로 그 주변에 3700㎡ 규모의 과도 풀을 설치한다며 2차 추경에 14억2000여 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곧바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물려로 이월시켜 입찰에 나섰다. 모두 전액 군비 사업으로, 1년 가용예산이 50억원 안팎인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그 3분의1을 과도 풀 설치에 쓰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물놀이장의 규모가 작아 올 여름 열리는 연꽃축제에서 관광객 편의시설로 쓰기 위해 서둘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인근 합평

이나 영암 등에도 과도 풀이 설치돼 있으며, 최근 가용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곡성군의 ‘심청 효문화 체험 및 경관조성사업’은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일원에 1만8315㎡ 규모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모두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비 60%, 군비 40%로, 곡성군은 3년간 매년 1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미 부지는 대부분 매입한 상태”라며 “지난 2012년 말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선거와 연관이 없으며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도 통과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어촌정주한인 영광군 백수읍 대신항 개발사업 사업비는 71억304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영광군이, 나머지는 원전사업자 위탁시설사업비에서 지원된다. 사업기간이 3년

이어서 매년 1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군은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입찰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장흥군의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2년간 22억57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군비는 6억 여원으로, 군은 2만865㎡ 면적의 생태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자연습지를 조성해 관광기반시설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임기 마감을 앞두고 향후 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자치 단체장을 옥죄는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서 추가 부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성 강제동원 피해자 370명 첫 확인

日전범기업 26곳 현존…피해 보상 소송 길 열려

일제강점기 우리 여성들을 끌고 가 강제로 노동을 시킨 혐의 일본 전범기업 작업장과 피해자 수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 소송의 길이 넓어지게 됐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6일 “일제 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한 기업은 모두 26개로, 피해자 370명을 강제 동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고를 받아 여성 노동동원 피해자로 판정했던 1419건을 조사·분석해 검증한 결과 559건에 대해 강제동원됐던 작업장을 확인했

다. 이 중 혼존기업에 대한 피해 건수는 3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업장별 세부 직무도 확인됐다.

피해 보상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를 동원했던 기업이 지금도 존재해야 하고, 여기에 동원됐던 증거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는 강제 노동동원을 당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인데, 이번에 피해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피해보상 소송 확대를 위한 첫걸음이 마련됐다. 피해 여성들은 1938년 5월부터 1945년 8월 사이 동원됐으며, 여기에는 일제가 1944년 8월 내린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동

원된 근로정신대도 포함된다.

동원 지역별로는 일본에 끌고 간 기업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국내 5곳, 사흘린 1곳, 국내와 일본 모두 동원한 곳이 1곳이었다.

확인된 기업 명단에는 일본 3대 벌로 꼽혔던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굴지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미쓰비시 계열에는 모두 54명의 여성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네가후치공업은 방적공장에 국내와 일본에서 42명을 동원했다. 지금은 화장품으로 유명한 가네보의 전신이다. 해방 후 전남방직으로 이름을 바꾼 이곳 국내 공장은 김부성 의원 부친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은 여성은 동원한 곳은 후지코시강재로 일본 공장에 총 114명을 동원했다.

/연합뉴스

## 육군병력 2022년까지 11만명 줄인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작전수행 ‘군단’ 중심으로

앞으로 8년간 육군 징집병력이 11만 명 이상 줄어들고 1·3군 사령부를 대체할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핵심 군사전략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동등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밝힌 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2년 8월에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국내의 안보정세와 지금까지 국방 개혁 추진실적이 반영됐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져 있다. 군단의 역할과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국방부는 육군 1·3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작전 변화를 주기로 했다.

1·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자사)로 통합해 예하 군단급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 군단급도 공군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대장인 1·3군사령관 자리가 통합됨에 따라 4성 장군도 기준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게 될 전망이다.

군단은 현재 8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사단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하게 된다. 군단급 부대의 작전수

행으로 인해 우리 군의 작전지역은 현재보다 3~4배 넓어진다.

육군과 해병대가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는 2021년에 해양경찰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병대는 제주도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9여단’을 편성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고 공군은 한반도 상공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하게 될 ‘위성감시통제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병력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63만3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 1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 감축은 육군만 해당된다. 징집 사병이 대폭 줄어들 때 따라 군 간부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2025년에는 42.5%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KT 홈페이지 해킹…1200만명 고객 정보 유출

KT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도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KT는 정보 유출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업체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The New E 300 4 MATIC Avantgarde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